

민주당 '상생연대 3법' 2월 처리 속도전

내일 정책 의총서 현안 논의...주중 코로나 불평등 TF 소집 국민 공감대 형성 위해 토론회·공청회·현장 방문 일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코로나19 불평등 극복을 위한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대 3법으로 영업제한손실보상제와 함께 제안 드린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도 당내에서 준비를 서두르겠다"면서 "협력이익공유와 사회연대기

금이 참여 주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는다. 마스크에 비유하자면 몇 사람만 마스크를 많이 갖는 것보다 그것을 조금씩 나눠 마스크를 모두 끼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 상처의 회복과 미래를 향한 도약도 공동체 정신으로 탄력을 받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상생연대3법까지 갖추면 대한민국은 진단·치료·

예방에 이어 상생의 태세까지 갖춘 명실상부한 선도국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해 "시장에서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된다거나 상가의 30%가 문을 닫았다는 상인들의 절규를 들었다. 지금의 코로나 방역의 성과는 그 분들의 눈물로 이뤄진 것이며, 그 가운데는 정부의 영업 금지 또는 제한 조치로 문을 닫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우도 있다"며 "우리 당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다. 2월 임시국회부터 충분히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정책 의총을 열어 상생연대

3법 등 2월 임시국회 입법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주안에 당내 코로나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도 소집해 관련 사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상생연대 3법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토론회, 공청회, 현장 방문 등의 일정도 추진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가급적 2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법의 경우 법 개정, 제정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고 협력이익공유법은 조정식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연대기금법은 제정법으로 가

닥이 잡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손실보상법은 개정을 할 수도 제정을 할 수도 있는데 개정으로 하면 처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력이익공유법에 대해서도 "정태호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상태여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면 (처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사회연대기금법에 대해서 "제정법이어서 과거 사례를 분석하고 현 상황을 잘 반영해야 해서 2월에 물리적 시간이 얼마만큼 허용될지 잘 가능해야 한다"며 "4월에도 임시국회가 있다"고 부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檢 수사·기소 분리, 여야와 머리 맞대겠다"

법무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형사·공판부 우대 기조 유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이어온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라는 대원칙을 존중하고 가다듬겠다"고 밝혔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와 관련해 "왜 이 사건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대상이 돼야 하느냐"면서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에 대한 철학을 묻는 위원 질문에 "장관이 되면 조만간 인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형사·공판부 우대는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다뤄야 할 주 포인트"라며 "인권, 적법절차, 사법적 통제라는 3가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막을 방

법으로 "그중에 으뜸은 수사와 기소 분리인 것 같다"며 "장관으로 취임해도 여야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좋은 방안들을 상의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국민이 검찰개혁을 원하는 이유는 검찰권의 남용이 있었고, 그 남용을 제어해야 할 검찰총장의 여러 직무상 지휘·감독권이 검찰권 남용과 함께 어우러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이라며 "장관의 지휘·감독권은 검찰권의 남용, 특히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 부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후보자는 김 전 법무부 차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하다. 저는 절차적 정의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왜 이 사건이어야

하느냐"고 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 절차는 형사사법의 양대 축"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이 절차적 정의나 실체적 정의냐는 문제인데 (이 사건을)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검찰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나 나오기 직전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것과 공익신고에 수사자료가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되면 공익 제보 여부, 수사자료 유출, 출국 배후세력 등을 포함해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이영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장관이 된다면 차관으로서 만나야 할 분"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보도를 통해 봤다"고 답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박영선·이상호 본격 '양자 경쟁'

민주 서울시장 보선 후보 도전...스마트슈퍼 방문·정책 발표 등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선선거에 도전하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상호 의원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박 전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예고한 뒤 이낙연 당대표를 찾아 사전 신고를 했다. 당 상징색인 파란색 운동화를 신은 박 전 장관은 "이 대표가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을 이번 선거를 통해 시민들에게 잘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격려해주셨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 동작구의 스마트슈퍼 1호점을 찾았다. 낮에는 유인, 밤에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점포로, 박 전 장관 재임 시절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26일 출마선언식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비대면으로 하기로 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시대

로벌 수도 서울의 미래 100년 계획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이 시대 서울시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넓게 만나고 깊게 들여다보며 대답을 찾겠다"고 썼다. 우 의원은 이날 부동산 공약의 '디테일'을 공개했다. 야권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서울 전역을 공사판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은 무리하다"고 비판했다. 또 "구상이 답답해야 서울이 변화할 수 있다"며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위에 인공부지를 건설하는 공약을 거듭 강조했다. 자신의 강점에 대해서 "저는 진보의 가치를 대표하는 주자"라며 "우리를 지지했던 40% 콘크리트가 무너진 상황에서 진보를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전남도의회, 오늘 새해 첫 임시회

다음 달 2일까지...김한중 의장 불신임안 상정 여부 주목

전남도의회(의장 김한중)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첫 회기인 제349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임시회 개최 첫날인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장석웅 전남교육감으로부터 2021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각 상임위는 해당 실국과 공기업·출연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전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남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전남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안' 등 민생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고, 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코로나 백신 접종 준비 점검 등 코로나 19 관련 현안을 살피고, 교육위원회는 온라인 수업 준비 등을 점검하며 비대면 수업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김한중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과 관

련해 이번 회기에서의 안건 상정 및 표결 여부도 주목된다. 임종기(순천2·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대표 발의한 불신임안에는 민주당 의원 14명 등 15명이 동참했다. 임 의원 등은 "김 의장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위원을 부당하게 추천하고 민간공항 이전 관련 동료 의원 5분 발언 기회를 부당하게 차단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장의 직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르면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능하다. 불신임안이 통과하면 의장은 직에서 해임된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현재 불신임안은 가접수 상태로 회기 중 제1 부의장이 본회의 안건에 상정할지에 대한 1차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개최 이전 발의안에 동참한 일부 의원이 철회 의사를 밝힐 경우 안건 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h@

농성동 남양휴튼

농성동 시세차익 마지막아파트 (전세대 구.33평, 총 419세대)

**청약통장 필요없음
전매제한 없음**

지하철 더블역세권 | 숲 세권 | 원스톱학군

- ▶ 안방, 거실시스템에어컨 무상
- ▶ 중문 무상
- ▶ 발코니 확장비 무상

※ 코로나19로 홍보관은 방문예약제로 운영되오니 꼭 미리 연락주세요!

1800-1548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없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 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왕영~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